

이재명 “尹정부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적극 나서달라”

민주당 인권위 출범식...“당이 나서야” 주철현 위원장 “야당 수사, 정치 탄압” “이태원 참사 2차 가해도...인권 말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인권위원회 출범을 향해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나서 개선, 침해 방지,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20일 민주당 인권위 출범식에서 “당 정체성을 보여주는 인권위가 출범하게 됐다”며 “우리가 인권이 너무나 당연해 공기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가 희박해지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화되다보니 또 다시 인권의 중요성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

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압박하거나,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인권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로 존중 받아야 하고 정치 대리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다져내고, 퇴행을 막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뿐 아니라 실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엔 당이

적극 나서 인권 개선, 인권 침해 방지,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인권위는 초선 주철현 위원장 외 부위원장 18명으로 구성됐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전 정권 인사, 야당에 대한 전 방위적 기획 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이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보여주기, 낙인찍기, 망신주기 수사”라며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한 2차 가해와 인권 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암사 단어를 지우고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 등 온갖 폐악 질을 일삼았다”는 등 비난했다.

아울러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이며 인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을 말할하는 범죄”라며 “어떤 정권 시대이든, 룩 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보편 가치가 지켜지고 상황이 개선되도록 최이슬기자

野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노조 탄압 행위 중단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조활동 부당개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일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뜬금 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건설노조의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의 표준입대단을 요구를 가적당함

“대기업 횡포 막을 권한으로 노동자에 봉동이”

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절행위 등으로 제재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건설기계 지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심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봉동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심각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직 심사 중인 건설노조 관련 사건과 비교하며 ‘건설노조 조합원을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화물연대 소속의 조합원에 대해 사업자로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보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인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수법적 기관으로서, 심판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이 부여한 역할의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행정부의 규칙까지 모두 위배하는 이번 노조활동 부당개입을 당장 중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행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호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조금 실태점검을 통해 ▲특조금 사업신청시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제도 운영과정서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 참여 절차 부재 ▲사후 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기준 시도별 제제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 현황을 보면 2019년 307억 8000만 원, 2020년 321억 2800만 원, 지난해 395억 4700만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남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군의 지역개발 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특조금 사업 심의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전년도 교부사업의 공개 등 예산낭비 소지를 방지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